



[뉴스]  
AI  
바둑 뿐 아니라  
주식도 고수  
02



Economy

코스피  
2287.61  
(-4.16)  
코스닥  
815.18  
(-4.82)

금리  
(국고채 3년)  
1.91  
(+0.01)  
환율  
(원·달러)  
1124.00  
(+2.50) (6일)

감독당국-세무당국 사이에 끼인 생보사…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 자살보험금 백기든 보험社에… 국세청 “稅金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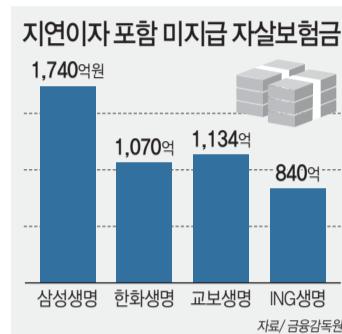
소멸시효 지났지만  
금감원 권고로 지급  
지연이자稅는 부당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백기를 들면서 일단락된 줄 알았던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따지면서다.

생보사들은 거액의 세금에 ‘고의성’ 판단으로 인한 벌금까지 부과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지시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분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생보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6일 오후 3시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인정해줄지에 대한 최종 결정에 들어갔다.

과세사실판단 자문은 과세사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이 과세하기 전에 세금 규모가 너무 크거나 미비점이 우려될 때 생보사들이



실을 심의해달라고 본청에 요청하는 제도다.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문제는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ING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정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세법상 손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손비에 따라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의 원금과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사별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삼성생명 1740억원 ▲한화생명 1070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ING생명 840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

험금과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청구가 정당 했음에도 생보사들이 보험업법과 약관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지급을 미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발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감원 지시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 했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상 소멸시효가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CEO 문책까지 받을 수 있어 전액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6년 금감원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당시 주계약서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생보사들은 약관상 실수 일뿐이며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 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기관·대표에 대한 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들어오자 보험 3사는 결국 4000억원을 토해냈다.

생보사들은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문위에서도 국세청과 같은 결론이 나면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추징금은 수백억원 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지시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전액 지급됐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심사과 관계자는 “자문위 내용은 과세 절차 중 하나로 내부 내용은 비공개”라면서 “과세를 할지 말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일 뿐 나머지는 자문 결과를 통해 조사과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 설명을 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오른쪽부터) 정 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 18~20일 평양서 개최

# 판문점선언 이행, 비핵화 긴밀 협력키로

##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남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평양 정상회담’ 전에 열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일 부산행 크루즈가 지연되자 오사카항에 승객들로 북적였다.

## 4반세기 최강태풍에 日 열도는 ‘아수라장’ 지하철 노숙만 9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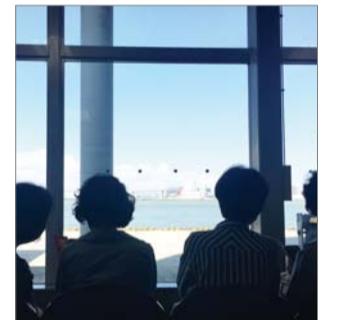
### 현장에서

#### 日 태풍현장 탈출기

지 택시비는 약 30만원.

그렇게 지하철 노숙이 시작됐다.

오후 12시. 항공사 앱(AP)을 통해 운행 여부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비행기 편이 잇따라 결항된 상태. 기자의 비행기 편은 오후 6시 50분에서 저녁 8시 20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항공사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겨우겨우 항공사 측과 연락이 달아 현지 상황을 전해 들었다.



부산행 크루즈를 기다리고 있는 관광객 모습.

항공사측은 “주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공항에 가 있으라”고 응대했다고 전해들었다. 항공사 말을 듣고 바로 공항으로 갔다면 돈대로 들고, 고립대로 됐을 것이다.)

오후 4시. 여전히 전철은 운행 대기 상태였고, 항공사로부터 결항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 5시까지 기다리다가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시 쯤 항공사 앱을 통해 ‘결항’ 소식을 알게 됐다. 이후부터 부산 도착까지 항공사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2면에 계속>

/글·사진=손엄지 기자 sonumji301@